DBpia

일제하 소록도 자혜의원 설립 및 확장에 따른 토지수용과 주민저항에 관한 연구

정근식* · 김영숙**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소록도 자혜의원의 설립과 제1차 토지수용
3. 1926년 제2차 토지수용과 주민저항
4. 1933년 나시설 대확장에 따른 제3차 토지수용
5. 맺음말

[초록]

조선총독부는 1916년부터 193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록도의 토지를 수용하여 나요양소를 건설하고 확장하였다. 지금까지 이 과정은 소록도갱생원측의 자료와 일부 언론보도에 입각하여 기술되어 왔다. 이 글은 이 과정을 소록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려는 것이다.

첫째, 소록도자혜의원 설립을 위한 제1차 토지수용은 소록도 서쪽지역의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총독부는 주민들에게 추가 토지수용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주민들로부터 양보를 받아냈다. 둘째, 제2차 토지수용은 1926년 시설 확장을 위한 것으로써, 소록도 남부의 일부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소록도 주민들은 1916년의 약속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는데, 일제 당국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이를 진압하면서 토지수용을 강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차 토지수용은 1933년 조선나예방협회를 전면에 내세운 시설 대확장 사업에 따른 소록도 전 도의 매수였다. 이 때 총독부는 이전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으로 토지보상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주민들 또한 1926년의 경험 때문에 저항의지를 상실하고 총독부의 토지수용을 받아들이고 섬 밖으로 이주하였다.

소록도 토지와 임야에 대한 공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토지 및 가옥을 수용당한 주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역사사회학)
** 건국대 사학과 박사과정수료(한국 근대사 전공)

www.dbpia.co.kr

민들의 규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다른데, 이 차이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문헌자료의 한계와 더불어 원주민들로부터의 증언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의 고향상실감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식민지 상황에서, 그리고 해방 후 소록도병원이 국립시설로 유지되면서, 이들은 공론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주제어] 소록도자혜의원, 토지수용, 조선나예방협회, 주민저항

1. 문제의 제기

이 글은 일제하에서 이루어진 근대적 癩시설로서의 소록도 자혜의원의 설립과 확장에 따른 소록도 토지수용의 실태와 그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총독부는 한편으로는 선교사들에 의한 癩구료와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서의 공립 癩요양소 설립에 영향을 받으면서, 1916년 전라남도 고흥반도 남단의 작은 섬, 소록도의 토지와 가옥 일부를 수용하여 부랑 한센병자를 수용하기 위한 소록도 자혜의원을 설립하였다. 10년 후인 1926년에 다시 소록도 자혜의원의 남쪽지역의 인근 토지를 수용하여 시설 확장을 하였고, 세계 경제공황과 만주침략을 계기로 증가하는 한센병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1933년에 소록도 섬 전체를 수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한센병 연구는 한편으로는 대한나관리협회의 한국나병사(1988), 심전황의 소록도의 역사에 관한 회고적 연구(1993), 소록도 80년사(1996), 천주교 구라사(2002) 등의 기관사에 의해 대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정기(1994)와 정근식의 일련의 연구(1997 a, b; 2002), 그리고 다키오 에이지의 연구(瀧尾英二, 2001) 등으로 대표되는데, 2005년 이후 한센병 회복자들의 인권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와 함께 새로운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한순미, 김기주, 2011; 김미정, 2012). 지금까지의 소록도병원의 역사에 관련된 서술이나 연구가 주로 병원 당국과 수

www.dbpia.co.kr

용 환자와의 관계로 분석되었는데, 소록도병원사는 특정 기관의 고립된 역사가 아니라 지방사의 맥락에서 재배치된다면, 소록도에서 거주했던 원주민이나 소록도 자혜의원이 지방사회에 미친 영향을 연구의 시야에 넣을 것을 요구한다.[1] 이런 맥락에서 김기주(2011)는 『소록도 자혜의원 연보』에 충실한 연구를 하였는데, 특히 소록도 자혜의원의 설립과 확장에 필요한 토지수용과 이 과정에서의 주민저항에 주목하였고, 토지수용에서의 수용가격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만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시도하였다.

소록도 자혜의원의 설립과 확장에 필요한 토지수용에 관한 식민지 당국자들의 기술은 『소록도 자혜의원 연보』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나병사』(1988년)와 『소록도병원 80년사』(1996년)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1926년 당시 토지수용을 당한 주민들의 저항을 검토하면서 과연 식민지 당국자들의 기술이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에 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 글은 1916년 자혜의원 설립에 따른 소록도 토지수용실태, 1926년의 제2차 토지수용과 주민들의 저항의 원인, 그리고 제3차 토지수용 실태와 수용결과에 따른 주민의 出島를 차례로 밝혀보고자 한다. 왜 제2차 수용에서 주민들의 저항이 컸고, 더 큰 규모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진 제3차 토지수용에서는 주민들의 저항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응답은 원주민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소록도 자혜의원의 설립이 1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것의 확장이 1926년과 1933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직접 경험했던 원주민들은 생존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자료마저 없는 실정이다. 다만, 1926년 토지수용 당시에 주민들의 저항이 형사처벌로 이어졌으므로, 이 재판서류를 확보하면 그들의 목소리를 부분적으로 복원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1) 한센병이 1982년 복합적 화학요법의 보급에 따라 의학적으로 정복되고, 2000년대 초반에 소록도병원에 거주하는 입원자들이 크게 줄면서, 소록도병원의 장기발전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당시 생존해있던 소록도 원주민의 토지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한센병의 역사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다.

www.dbpia.co.kr

는 이 서류의 보존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소록도의 토지수용이 기록되어 있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아울러 미흡하나마 당시 소록도 주민의 『제적등본』 일부를 통해 토지수용에 따른 원주민들의 이주를 포함한 주민대응의 일단을 확인하려고 한다.

2. 소록도 자혜의원의 설립과 제1차 토지수용

1) 자혜의원 설립 전후의 소록도

식민지 초기인 1915년 조선총독부는 문명담론을 내세워 식민지조선의 나환자들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격리수용할 방침을 세우고 나시설 후보지 선정을 군의감 하가 에이지로(芳賀榮次郎)에게 명하였다. 같은 해 5월 나시설 후보지를 물색하던 야마네 마사지(山根正次)[2] 등 일행은 함께 경무총감부의 경비선을 타고 부산에서 목포까지 섬들을 순회하다가 소록도를 선정하여 총독부에 보고하여 최후 결정을 받았다.[3]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한 소록도가 나시설의 적지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회로부터 떨어진 격리된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909년에 전국 5개의 공립 나요양소를 설치 운영하며 문명국 일본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한센병환자의 존재에 대하여 외국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 〈부랑환자취체규칙〉을 만들어 은폐적 격리를 시행

2) 야마네 마사지(山根正次)는 長州 출신으로 동경대를 1882년(明治 15년) 졸업하였다. 그는 메이지유신 이래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소네 아라스케(曽禰荒助),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총독과도 친밀하였다. 야마네(山根正次)는 5년간 영, 불, 이탈리아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귀국 후에는 경시청 제3부장, 경찰의장으로서 동경 위생행정을 맡았다. 그 후 관직에서 물러나 대의사가 되어, 그때 「나예방법안」을 제국의회 중의원에 제출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그는 위생고문으로서 1910년부터 1916년까지 조선 위생행정에 관여하였다. 소록도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던 1915년에 하가(芳賀) 총독부의원 원장과 의육과장 사토(佐藤) 등과 현장조사를 하였다. 1925년 8월 29일 동경에서 사망하였다(光田健輔, 「光田健輔と日本のらい予防事業」, 藤楓協會 편집겸 발행, 1958년, 436쪽).

3) 하가 에이지로(芳賀榮次郎), 『芳賀榮次郎自敍傳』(1950년)에 기재한 〈조선시정25주년에의 감회(1934년 기고, 1935년 탈고)〉

www.dbpia.co.kr

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 한센병 정책의 핵심인물인 미쓰다 겐스케(光田健輔)[4]는 일찍부터 '절대적 격리'를 유일한 나대책으로 보고 1915년에 〈癩予防に関する意見〉을 내무성에 제출하였는데, 제1안이 '정부가 국립요양소를 하나의 격리된 섬(絶海の孤島)에 만들어 일본의 한센병환자를 섬으로 절대격리'하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총독부가 '소록도를 나시설 부지 선정으로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이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격리된 섬'이라고 밝히고 있어 조선에서 미쓰다의 구상을 실현시켜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 제1차 소록도 토지수용에 이어, 1926년에는 제2차 토지수용을, 1933년에는 제3차 토지수용을 하였다. 제1차 수용과 제2차 수용은 섬 일부의 수용이었으므로 토지 특히 가옥이 수용된 섬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섬 내로 이주하였는지, 섬 외로 이주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현재까지는 없다. 1933년 제 3차 토지수용은 소록도 전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들은 모두 섬 외부로 이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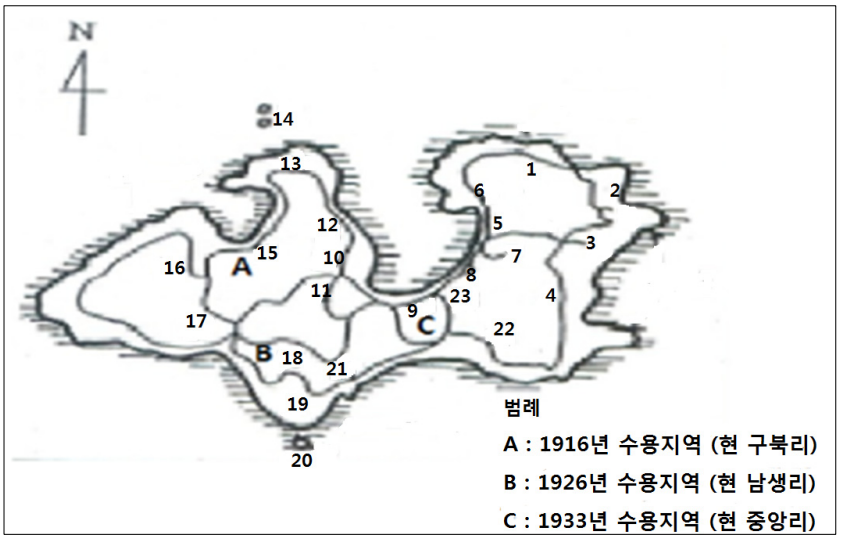
제1차 수용에서 제3차 수용 전후의 소록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1983년 소록도병원에 근무하던 윤석선은 소록도병원 인근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찾아 그들이 기억하는 소록도의 모습을 재구성한 지도를 소록도병원이 발행하는 잡지에 게재하였다.[5] 아래의 지도와 표는 그가 작성한 소록도 토지수용 추이에 따른 나시설 설립과 당시 형성된 마을현황을 마을을 중심으로 다시 그린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총 177호의 가옥이 소록도의 여러 곳에 분산하여 자연마을을 형성하고 있었고, 900여명의 주민들이 농업과 수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4) 미쓰다 겐스케(光田健輔, 1876~1964)는 일본 한센병 정책의 핵심 인물로, 절대격리주의자이다. 1928년 일본 나학회를 결성하였고, 국립요양소 원장의 징계검속권을 비롯하여 단종법 등의 차별법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식민지 시기 뿐 아니라 해방 후에도 한국과 대만의 나병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5) 윤석선, 1983.9, 「소록도4호－잊혀져 가는 소록도의 이모저모－」, 『국립소록도병원』: 제1차 토지수용과 제3차 토지수용 사이에는 17년간의 시차가 있고, 1~2차 토지수용 후 섬내로 이주한 사람들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서, 이 지도와 표에 표기된 내용이 어느 시점의 기억인지는 약간 분명하지 않다.

www.dbpia.co.kr



〈그림 1〉 소록도 토지수용 추이에 따른 자혜의원 시설과 마을 현황(1916~1940)

〈표 1〉 소록도병원의 주요시설 부지의 원래의 지명(1916~1940)

연번	지금의 위치	옛 지명	연번	지금의 위치	옛 지명
1	북관사 십자봉	안산	13	새마을 돌각	붉은 대기
2	북관사	도잡	14	새마을 앞쌍섬	살패기
3	동관사	낡은터	**15**	**구북리**	**도장금**
4	남관사 일부	여시금	16	교도소 주변	가듬골
5	우체국 주변	집앞	17	서생리	띄밭금
6	제비 선창주변	힌들금	**18**	**남생리**	**외뱀이**
7	장안리 일부	음산	19	남생리 등대돌각	꽃섬끝
8	장안리와 지도부 중간지대	여시금	20	남생리 앞똥섬	꽃섬
9	**중앙리**	**비드네**	21	동생리 선창	물막금
10	신생리	대밤금	22	공원일부 및 동생리 1구	돌재
11	신생리	대밤금	23	도서실주변	오지바
12	우체국 주변	집앞			

출처: 윤석선, 1983.9, 「소록도4호－잊혀져 가는 소록도의 이모저모－」, 『국립소록도병원』, 4~6쪽.

www.dbpia.co.kr

2) 소록도 자혜의원의 설립과 제1차 토지수용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서 초기 의료선교에 대하여 주목하였고 그 가운데에도 선교의의 나병 구료의 정치적 효과를 경계하였다. 총독부는 문명담론을 내세워 나구료 시설에 수용되지 못한 나병환자는 도로나 시장 등을 부랑배회하거나 토굴생활을 하며 병균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위생상, 인도주의상 위험하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총독부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던 식민지 조선의 나구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든 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체면을 세우고 식민지 선정을 베푼다는 인식을 주는 선전효과의 필요성에서 소규모의 형식적인 나시설 설립을 구상하며 구라사업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였다.[6]

1913년 총독부는 조선의 나환자를 조사하여 외모에 나타나는 자가 이미 3천명이 넘었다고 보고 나환자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모색하였다.[7] 같은 해 조선총독부 위생고문 야마네(山根正次)는 위생강연에서 조선의 나환자도 '격리수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8]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조선총독은 구료기금으로 제생원에 보관된 기금 일부를 사용하여 부랑 환자를 일정한 장소에 수용 구료할 계획을 강구하였다.

이듬해인 1914년 5월경부터 『매일신보』 등 총독부 기관지와 일본어 신문들은 '문둥이' 기사를 자주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나환자를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으로 묘사하였다.[9] 이들은 주로 '신체 훼손'과 비윤리적 해위를 통해 대중들에게 사회적 불안감과 공포감을 형성하고 한센병환자를 공동체사회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1915년이 되자 총독부는 총독부의원장인 하가 에이지로(芳賀榮次郎)[10]에

6) 정근식, 1997, 「한국에서의 근대적 나 구료의 형성」, 『보건과 사회과학』 1-1, 15쪽.
7) 小串政治, 1921년 8월, 「朝鮮ニ於ケル癩患者ノ狀況」, 『조선위생행정법요람』.
8) 야마네 마사지(山根正次), 1913.12, 「위생강연」, 『朝鮮總督府月報』 第三卷 第 一二號.
9) 『매일신보』 1914년 5월 24일.
10) 하가 에이지로(芳賀榮次郎)는 1887년 동경제국대학 의학과를 졸업, 곧 바로 육군에 입대하여 1888년 2등 군의에 임명된다. 1910년 군의총감으로 진급하여 1914년 조선총독부 의원장(總督府 醫院長)겸 경성의학전문학교장이 된다. 초기 대만을 비롯한 조선의 의료에는 일제 軍醫의 역할이 지배

www.dbpia.co.kr

게 '나시설 부지선정에 대한 적지조사'를 지시하여 조선총독부의 나구료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였다. 나환자 수용시설로 적합한 장소를 찾아 나선 그는 '소록도를 한센병 수용시설 적지로 선정'하여 총독부로부터 최종결정을 받았다. 총독부가 소록도를 나시설 부지로 선정하는 데는 몇 가지 이점이 고려되었다. 가장 먼저 고려한 점은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여 환자를 격리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로써 한반도 남쪽의 경상남도 주위의 해안도서를 순회하여 최종적으로 소록도를 나시설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소록도는 온난한 기후조건과 물산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난방비 절감과 풍족한 해산물 수급 등의 경제적 요인이 크게 반영되어 총독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이점까지 충족하여 더할 수 없는 장소였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총독부는 1916년 2월 24일 조선총독부령 제7호에 의거하여 한센병환자 전문 수용시설로써 소록도 자혜의원 설립을 공포하였고, 이어서 한센병환자 수용에 필요한 나시설 설립에 따른 소록도의 토지수용에 착수하였다. 소록도 민유지 토지수용의 법적 근거는 1911년 4월 17일 제령 제3호로 제정 공포된 조선토지수용령[11]이었다. 그러나 1910년대의 토지수용은 협의매매 이외에 기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이것은 토지강탈의 요소가 있었다.[12] 소록도 자혜의원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당시 소록도는 토지수용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던바, 다분히 토지강탈의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설립에 따른 소록도 토지수용에 대한 내용은 1917년『매일신보』5월 30일

적이라 할 수 있다(瀧尾英二, 2001,『朝鮮ハンセン病史: 日本植民地下の小鹿島』, 未來社, 46~47쪽).

11) 조선토지수용령은 1911년 4월 17일 제령 제3호로 제정・공포되었고, 동년 6월 29일 토지수용령시행규칙이 부령 제80호로 공포되었다. 조선토지수용령은 전체 29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의 토지수용법이 10장 88조로 엄밀하게 구성된 것에 비하면 간략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토지수용령을 이렇게 제정한 이유는 국방・철도・도로 등 각종 교통시설과 위생시설 및 재난 방어시설, 그리고 제련, 경금속 등 각종 공업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토지를 싸게 점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토지수용이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권리는 조선총독에게 부여하였고,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지방장관이 조선총독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수용 불복에 대한 소원제도 조항은 없었다(전창진, 2012,「한일토지보상보상법 비교연구」,『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7권 제1호)』).

12) 廣瀨貞三, 1999,「朝鮮における土地收用令－1910~20年代を中心に」,『新潟國際情報大學 情報文化學部 紀要』, 3쪽.

www.dbpia.co.kr

자에 게재된 단신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고 있다.

> "민유가옥 10여동과 그 주변 20여만평을 수용하여 거주자를 퇴거조치 시킨 뒤 수용된 한센병환자 가운데 경쾌자나 희망자는 이곳의 전답에서 농사도 지으며 생활하였다"…(중략)

이 기사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기록된 자료로는 1929년『소록도 자혜의원 연보』이다.『연보』에 따르면 "1916년 3월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록도 서쪽의(섬의 약 1/6) 299,744평과 민유가옥 10동(건평 87평)[13]을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14] 이들 자료만으로는 자혜의원 설립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위치나 소유주, 지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여부나 보상가격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당시 소록도 토지수용 실태에 접근하기 위하여, 소록도의『토지대장』과『임야대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토지대장은 일제가 실시한 조선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토지에 대한 기본장부로써 1914년 이후의 토지 소유구조 변동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토지대장은 실제의 토지소유권 변동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15]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나 토지수용 지번을 파악하여 수용토지 지역의 위치와 주민의 이주상태를 확인하는 자료로는 토지대장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는『토지대장』의 지목, 지번, 면적을 비롯하여 소유주의 주소와 소유권 변동상황을 통하여 주민의 이주상황도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토지대장』과『임야대장』[16]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1916년 자혜의원 설립

13) 조선총독부, 1929,『小鹿島 慈惠醫院 槪況~昭和 4年』, 84쪽.
14)『한국나병사』에서는 '가옥 10여동과 토지 19만 9천여평(299,744평의 오기로 판단됨)'을 매수하였다(74쪽)고 기록하고 있다.
15) 토지대장이 가지는 한계에 대하여 조석곤의 논문 참조. 조석곤, 2001,「토지대장에 나타난 토지소유권의 변화」,『맛질의 농민들-한국 근세 촌락 생활사, 일조사』, 392~393쪽.
16)『임야대장』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중 하나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www.dbpia.co.kr

에 따른 소록도 토지수용 부지는 소록리 284번지를 비롯하여 소록리 518~533번지, 소록리 542~613번지, 소록리 663~664번지, 소록리 702~806번지 등으로써 대부분 소록도의 서쪽지역이 해당되었다. 이때 수용된 토지 대부분은 대지와 전답 등이었는데, 특히 수용된 토지 가운데 민유가옥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대(垈)의 소유주는 39명으로 확인된다. 최초로 소록도의 토지가 수용된 1916년은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직후이므로, 대지로 표기된 토지에는 실제로 가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최초로 수용된 가옥은 자혜의원 연보에 기록되어 있는 10동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 가옥을 포함한 상당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강긍문, 박가복, 박성조, 장갑순, 장양옥, 장여진, 장운홍, 장봉록 등이었고, 이들은 소록도자혜의원 설립이전에는 도장금이라고 불렸던 마을의 주민들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소록도 공부(公簿)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수용된 토지일체는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1915년에 주민(토지 소유주)이 사정받은 것으로써 총독부에 의해 1916년 3월 28일에 '國'으로 소유권이 이전 완료되었다. 당시 수용된 토지면적은 아래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70,847보(步)로써 토지 면적의 단위는 보(步)[17]를 기준으로 적기되어 있다.

〈표 2〉 소록도 토지수용 현황 (1916년)

연번	소유자 (단위: 명)	면적(단위: 평), 기타			
		地目	공부면적(步)	자혜의원 槪況	차이
1	39	垈(대) 합계	4,182		
2	44	田(전) 합계	53,217		
3	3	林野(임야) 합계	679		
4	13	畓(답) 합계	12,769		
5		민유가옥		10동(87평)	
		총합계	70,847	299,704	228,857

출처: 소록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고흥군청)

임야대장의 장 번호 및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부이다.

17) 『토지대장』에 의한 면적 단위는 보(步)로 나타내고 있다. 보는 평(坪)과 같은 의미이다.

www.dbpia.co.kr

그렇다면 설립에 따른 소록도 토지수용이 일제측 관변자료와의 현저한 토지수용면적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이는 토지조사사업에서 공부에 누락된 토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 토지와 임야에 대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공부에 적확하게 기록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1916년 나시설 설립에 따른 수용토지에 대한 실제 보상가격은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밝혀주는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조선토지수용령 제7조, 제15조, 제19조 규정[18]에 의한 최소한의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09년 일본에서도 전생병원을 설립할 당시에 東京府 北多摩郡 인근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평당 50전의 토지에 대하여 1엔 80전의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보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9]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가보상이 소록도에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현지인의 증언 등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제1차 토지수용을 단기간에 마치자 곧이어 섬 주민을 퇴거조치하고 수용한 마을의 가옥을 이용하여 초기 환자들을 거주하도록 하였고, 가옥 인근의 수용한 논과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도록 하였다.

설립당시 환자를 수용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총독부는 '나환자수용에 관한 건'[20](1916년 11월 20일 內 二第 五六九號)에 근거하여 전국으로부터 환자들을 이송하였다. 총독부는 각 도의 경무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회문을 보내 환자수용을 명문화하였다.

> 소록도 자혜의원의 환자수용에 대하여 수용시설과 경비의 문제로 중증자 100명을 수용하는데 있어 노상이나 시장 등에서 배회하는 병독전파의 우려가 있는 자에

18) 조선토지수용령의 토지수용에 대한 지가보상 관련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關係人ノ受クヘキ損失ハ起業者之ヲ補償スヘシ」(7조), 「收用又ハ使用スヘキ土地ニ在ル物件ハ移轉料ヲ補償シテ移轉セシムルコトヲ得」(15조), 「起業者ハ收用又ハ使用ノ時期迄ニ補償金ヲ關係人ニ払渡スヘシ但シ払渡スコト能ハサル事由アルトキハ之ヲ供託スヘキ」(19조).

19) 多磨全生園患者自治會 編, 1993년, 『倶會一処－患者が綴る全生園の七十年－』, 16쪽.

20) 京畿道警察部, 「癩患者收容ニ關スル件」, 『京畿道警察法令聚』, 1924. 5.

www.dbpia.co.kr

국한하여 먼저 해당 관내에서 수송 처리하도록 한다. 환자 수송처리 방법은 먼저 도 경무부장에게 통지한 후 경무부장은 소록도자혜의원에 수용여부를 문의한 후 철도국과 우편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승차와 승선을 협의한 후 부첨인(경찰관리나 경무부 등)과 함께 이송한다. 수송비용은 육로의 경우 1인 1일 30전, 기선과 기차의 경우 3등칸 실비, 부첨인 중 경찰관리의 비용은 경무부로부터, 기타는 본인이 부담한다. 환자는 이송 전에 조사를 받은 조서와 민적부를 휴대하여 이송한다.

소록도자혜의원의 최초의 수용환자는 '노상이나 시장 등에서 배회하는 병독전파의 우려가 있는 자'들이었고, 이들의 수용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조선총독부의 한센병 환자 정책은 강제격리로부터 시작되었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강제수용은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소록도자혜의원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병원'과는 달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1916년 제1차 토지수용에 대하여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토지수용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단서는 『한국나병사』 73~74쪽에서 '주치일(朱致一)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하였고, 당국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여 토지매수를 할 수 있었다'고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우리는 이 기사에 나오는 주치일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록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검토하였으나, 토지 소유주로서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1933년의 제3차 토지수용에서 토지소유자로 "주태기, 주무기, 주양기, 주신기, 주재기, 주순기"등 "주씨"들이 여러 명 확인[21]되는데, 이 단서로서 제1차 토지수용을 당한 주민들의 일부가 섬 내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섬내 이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로써 1916년 소록도 토지수용에 기재된 소유주 명단을 대상으로 소록도 제적등본을 조사하여 확인한 바, 박성조를 비롯하여 강긍문, 박기복, 장갑순, 장양옥, 장여진, 장운홍, 장봉록 등 10여명은 제1차 토지수용을 당한

21) 주치일은 『토지대장』의 소유주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제적등본(호적부)』등 公簿를 검토한다면 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를 검토 하였으나 인명 확인이 되지 않았다.

www.dbpia.co.kr

후에 소록도 섬 내로 이주하여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소록도 자혜의원 건립에 따른 토지 수용을 단시일에 마친 총독부는 같은 해 7월 10일 육군군의 아리카와 도루(蟻川亨)를 초대원장으로 임명하고 시설 공사에 착수하였다. 1917년 초에 본관 1동을 비롯하여 진료소, 예배당, 병사, 목욕장 각 1동과 주임관사, 간호초소, 취사장 등 50여동, 477평을 건축하였다. 북쪽 해안 쪽에 관사들을 배치하고, 그 아래쪽으로 사무실, 진료소, 부속시설, 병사(病舍)를 순차적으로 배치하였다. 2월에 소록도자혜의원 건물이 준공되자 4월에는 병사를 건립하였다. 사무실과 진료소 사이는 철조망으로 분리, 구획되어 있었다. 총독부는 정원을 100명으로하여 전국 각지의 도로나 시장에서 부랑배회하며 병독 전파의 위험이 많은 자를 수용 하였다. 이들을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을 관 통첩 제 78호로 반포하여 각 도에 하달하였다.[22]같은 해 5월 17일 개원한 소록도 자혜의원은 정원 100명에 수용된 환자는 90명으로써[23] 총독부가 나수용 시설을 해놓았다는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였다.

1917년 자혜의원 설립초의 의료인력으로 의관인 아리카와 원장을 비롯하여 의원 1인, 서기 1인이 있고, 약제사무 촉탁은 2명이 번갈아 교체하며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맡았다.[24]

3. 1926년 제2차 토지수용과 주민저항

1) 자혜의원 1차 확장의 배경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문화통치로 식민지 지배방식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런 변화가 소록도자혜의원에 나타난 것은

22) 『조선총독부관보』 제 1407호. 大正 6년(1917) 4월 16일 〈통첩〉.
23) 조선총독부, 1931, 『小鹿島慈惠醫院年報 昭和 6年』, 69쪽.
24) 같은 책, 1931, 『小鹿島慈惠醫院年報 昭和 6年』,72~73쪽.

www.dbpia.co.kr

1921년 6월 23일 제2대 원장 하나이 젠키치(花井善吉)의 부임에서였다. '문화통치'로의 전환은 다른 문화영역보다 다소 늦게 소록도자혜의원에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이는 부임한지 3개월 후 선교의가 운영하는 부산 나병원을 비롯하여 대구, 광주의 나요양소를 시찰하고 그곳의 환자들의 생활을 살펴보았다. 그의 사립 나병원 시찰은 이후 소록도 나시설 운영과 수용환자들의 부분적인 생활개선 등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무렵 미쓰다 겐슈케(光田健輔)와 더불어 일본의 나정책의 중요한 한 사람인 위생관료 무라타 마사타카(村田政太)는 〈朝鮮に於ける救癩問題(1921년)〉에서 '당시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식민지하 조선의 한센병 환자가 2,030명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볼 때 1만 5천명 내외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소록도에 현재 121명 수용되어 있는 총독부의 나구료 실태는 국가적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며, 기독교 선교사에게 나구료를 의존하면 할수록 조선인을 동화시키는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사이토 마코토(濟藤實)총독에게 의견을 제시하였다.[25]

무라타는 조선의 한센병 환자관리가 식민지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는 총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총독부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나구료 실태에 대하여 비판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나관리 정책을 구상한 핵심인물인 미쓰다 겐슈케(光田健輔)도 1920년대 초반에 대만의 나구료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26] 동시에 "조선내의 서양선교사가 설립한 나요양소가 조선총독부의 눈위의 종양"이라고 표현하고,[27] 선교사에 의한 구라사업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사대적인 사고를 형성하여 결국 일본 식민지지배를 위태롭게 하므로 경계할 것과 일본 제국의 영토 안에서 나정책은 국가의 책

25) 무라타 마사타카(村田政太), 1921년 11월, 「朝鮮に於ける救癩問題」, 『日本及日本人』.

26) 조선과는 달리 대만총독부의 나병사업은 1900년부터 1927년까지 대만 전 지역에 걸친 나병조사를 제외하고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대만총독부는 1927년 타이페이(臺北)시 근교에 '대만총독부나병요양소 낙생원'을 설립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 따라 1930년 12월 12일 '대만총독부 낙생원'을 설립하였으며, 가미카와(上川豊)가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 323~324쪽).

27) 정근식, 1997, 「한국에서의 근대적 나구료의 형성」, 『보건과 사회과학』 제1권 제1호, 17쪽.

www.dbpia.co.kr

임 하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나구료에 대한 총독부의 관심은 하나이 원장이 부임한 지 1년여가 지난 1922년 11월 22일 사이토 총독의 소록도 방문으로 표출되었다. 사이토 총독은 3.1운동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후임으로 그 해 8월에 부임한 뒤 민심을 회유하기 위하여 한국민과의 접촉을 늘려 나갔다. 사이토 총독은 지방 순시를 통하여 스스로를 권위의 상징이자 자애로운 통치자로 표상하면서, 한국인의 저항심을 누그러뜨려 식민지배하에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사이토가 남부 조선 시찰 중에 광주를 순시하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소록도를 방문하여 환자를 위로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이토는 소록도자혜의원을 방문한 최초의 총독이었다.[28] 총독의 소록도 나시설 시찰은 1920년대 중반의 식민지 조선의 나정책 방향을 이끄는 중요한 동인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총독의 방문이 있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군 군의부장 마기다(牧田)는 1923년 1월 한센병시설 확장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 마기다는 "문둥병환자 172명이 수용된 소록도를 시찰하면서 당시 조선의 한센병환자를 4만 내지 7만으로 보고, 중환자만을 수용하고 있는 자혜의원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재정이 부족하여 시설확장이 어려운데, 시설확장을 위해서는 독지가의 기부를 기다리지 않고는 별반 방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센병 시설의 증설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총독부의 재정이 아닌 각계의 관심과 동정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그곳에는 주로 중환자들만 수용되어 있으며 환자들을 위한 1년 예산은 3만엔에 불과하고, 적은 예산으로 인하여 환자들은 부득이하게 자급자족으로, 야채류 등의 재배와 집수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자혜의원에서는 종래에 못 고치던 병을 전치할 수 있는 주사약을 투약함으로써 완치하여 퇴원한 환자도 있다고 주장하며 소록도에 수용된 환자들의 낙천적인 생활을 언급[29]하며 수용을 선전하였다. 총독과 군의부장의 잇따른 소록도 방문시찰은 결과적으로 공적영역에서 나시설 확장 필요성의 제

28) 『朝鮮朝日』 1922년 11월 23일: 『매일신보』 1922년 11월 24일.
29) 『매일신보』 1923년 1월 27일: 『朝鮮朝日』 1923년 2월 6일.

www.dbpia.co.kr

기와 함께 나시설 확장에 필요한 재정은 각계의 동정에 의존하고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의도의 표출이였던 것이다.

당시 조선인들도 조선총독부의 한센병환자 격리정책을 통하여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3.1운동 이후 창간된『동아일보』를 비롯한 민간지도 한센병환자에 대한 관심을 연일 보도하며 한센병 환자의 공간적 분리 즉 격리수용을 적극 옹호하고 있었다.[30]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연일 보도한 민간 신문들은 한센병 환자들의 참담한 상황과 수용시설 부족 등을 문제삼아 총독부 당국의 불충분한 격리 나시설에 대한 비판에 활용하였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곳에 개설된 선교 나수용시설 주변에도 수용을 희망하는 환자들과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수용을 거절당한 환자들이 집단으로 촌락을 형성하고, 부조회를 조직하여 총독부나 도 위생과 등에 보조금을 요구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31] 이러한 사회 여론과 요구는 한센병환자 수용시설 부족에 대한 참담한 실상을 더욱 부각시켰다.

1924년 3월 29일 조선남부 각지를 시찰중이던 총독부 정무총감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는 부산에서 〈癩患者救濟は經費ガ許きぬ〉[32]라는 담화를 통해 조선의 한센병환자 구제책과 관련하여 소록도와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사립요양소에 대한 원조를 언급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20년대 초반까지 소록도 나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분 확장을 하면서 한센병환자를 증원수용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식민지하 조선의 한센병환자의 증가속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수용시설의 증축에 불과하여 총독부의 수용시설 부족에 대한 인식은 더욱 점증되고 있었다.

30)『동아일보』1923년 12월 31일자에는 나환자 수용소 시설 부족에 대하여 나환자 스스로 상조회를 결성하거나, 1926년 5월 25일자에는 당국에 나병자 수용시설에 대하여 촉구하고 있다.『朝鮮朝日신문』도 1926년 6월 26일자 등에 나환자가 주로 '신체를 훼손'하는 기사를 실어 공중에게 혐오와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기사와 나환자가 상조회, 부조회 등을 결성하여 집단적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 당국이 골치라는 등 상당히 빈번하게 보도하고 있다.

31)『동아일보』1923년 12월 31일.

32)『朝鮮朝日』1924년 4월 3일.

www.dbpia.co.kr

2) 1926년 제2차 토지수용과 주민들의 저항

총독부는 1925년 4월 1일 칙령 제 85호로 「지방관관제개정령」을 공포하였고, 이어 총독부령 제29호로 「조선도립의원관제」가 개정되어 소록도자혜의원은 도립 시설로 나(癩)진료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게 되었다.[33] 자혜의원 운영과 공의배치 등 지방 의료정책과 관련한 권한이 도지사로 이관되면서 조선총독부에서 지원되던 예산이 축소되었다. 도립의원으로 변경된 소록도자혜의원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토지, 건물 등이 도 재정에 귀속되었다.[34] 소록도 자혜의원은 도립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정책이나 나 관리는 변함없이 여전히 조선총독부에서 담당하였다.

1925년 5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경찰부장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훈시를 내리고 있다.

> 본년도 나병환자 조사에 의하면 4,300여명인데, 이 수는 일부에 불과하고 만약 의학적 검진에 의한다면 그 수는 몇 배에 이를 것이다. 재정관계상 아직 나예방시설이 충분하지 못하여 환자들이 배회하며 집단화하는데, 위생상 사회질서상 이를 묵과하기 어려워 장래에 정부가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병독전파의 우려가 있는 환자에 대하여 향당부조 내지 지방시설에 의하는 등 적당한 방법을 고려하여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다.[35]

위 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 경무총감은 나예방 시설 부족을 언급하며 그 해법은 예산 범위 내에서의 나시설 대책를 의미하고 있었다. 요컨대 소록도 자혜의원의 수용시설의 증설을 위한 자혜의원의 부분적인 확장으로 구체화되었다.

총독부는 먼저 소록도 자혜의원 부분확장에 따른 토지수용 계획을 수립

33) 『조선총독부관보』, 1925. 4. 1.
34) 주상훈 · 전봉희, 2011년 11월, 「1910~20년대 관립 자혜의원 계획의 시기적 특징과 변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 27권, 제11호, 240~241쪽.
35) 『동아일보』 1925년 5월 23일.

www.dbpia.co.kr

하였다. 이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총독부 경무국장・위생과장과 총독부 내무국장・전남지사, 소록도 자혜의원장 등이 참여하였다. 이를 위한 각 부처간 협의 문서 교신은 19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자료가 확인된다.[36] 같은 달 18일 전라남도지사가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에게 보냈던 「소록도자혜의원 수용인원증가 및 경비에 관한 건」과 1926년 2월25일 총독부경무국장이 동 내무국장에게 보낸 「소록도자혜의원부설매수에 관한 건」[37]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三矢宮松), 내무국장 이쿠다 세이자부로(生田清三郎) 등과 함께 경무국 위생과가 이를 추진했는데, 당시 위생과의 기사 니시키 산케이(西龜三圭)[38]가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1926년 2월 25일 내무국장에게 보낸 경무국장 문서에 의하면 〈소록도자혜의원 부설매수비〉로 8,194엔의 예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 이 예산은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매입과 묘지 및 가옥의 이전료의 비용이었다. 이틀 후인 27일 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장은 전라남도 경찰부장에게 보낸 조회서에서 임야, 답, 전, 민가 5호의 주소위치를 그린 도면 2통을 송부하였다. 이후 새로 확장할 예정지역으로 3월 19일 전라남도 경찰부장은 경무국 위생과장에게 소록도자혜의원 확장예정지 도면 2통을 첨부하여 회답하였다. 그 후 수통의 통첩 등이 총독부 관계부 경무국장, 경무국 위생과장 혹은 총독부와 전라남도 도지사, 총독부 건축과장 사이에 '비(秘)'로 교신되고 있었다. 이에 기존 시설이 있는 곳에서 동남방향으로 8만 4천여평의 면적이 수용대상이었다.

---

36) 朝鮮總督府衛生課, 1925.6, 「小鹿島慈惠醫院收容人員增加及之カ經費ニ關スル件」, 全羅南道知事 『小鹿島慈惠醫院關係綴』(1925년~1934년).

37) 警務局長, 1926.2, 「小鹿島慈惠醫院敷地買收ニ關スル件」, 전라남도지사 『小鹿島慈惠醫院關係綴』(1925년~1934년)』.

38) 니시키 산케이(西龜三圭)는 1884년 12월 생으로 廣島縣 출신이다. 1911년 京都帝國大學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1924년 4월 조선총독부 技師에 임명되어 경무국 위생과에서 근무하였다. 1930년 4월에 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장이 되었고, 재단법인 조선나예방협회를 설립(1932년 12월 27일)하여 동협회의 상무이사를 맡는 등, 소록도 갱생원 확장(1933~1939)계획을 세운 중심적 인물이다(출처: 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인물검색 서비스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

www.dbpia.co.kr

〈그림 2〉1926년 소록도 자혜의원 매수예정 부지 도면
출처: 朝鮮總督府警務局長, 1926.2,「小鹿島慈惠醫院敷地買收ニ關スル件」, 全羅南道知事 『小鹿島慈惠醫院關係綴』(1925년~1927년)』

위 도면은 자혜의원 시설 확장에 따라 총독부가 수용을 계획하고 있던 소록도의 토지수용 부지 예정지 도면 일부이다. 도면에는 수용토지의 지번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자혜의원의 제2차 토지수용 계획이 진행되던 1926년 6월, 전라남도 경찰부장은 카미오 이치하루(神尾一春)라는 일본인이었고, 경무과장은 7월 2일 부임한 코가 쿠니타로(古賀國太郎)[39]였다. 전라남도 도지사 장헌식(張憲植)은 1926년 8월 14일부로 의원면직(依願免職)된 뒤, 이를 대신해서 충청남도 도지사 석진형(石鎭衡)이 전라남도 도지사로 임명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26년 8월 나시설 확장에 따른 토지 매수비를 책정하면서, 전라남도지사에게 매수예산보다 높은 액수로 토지매수를 할 계획을 세우고, 관할 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양해를 구하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당시 이제 막 새로 임명

39) 古賀國太郎은 1886년생으로 宮崎市 출신이다. 1911년 3월 6일 조선총독부 순사로 조선에 와서 충남, 전남에서 근무하였고 1926년 8월 30일 전라남도 경찰부 경무과장이 되었다. 1933년 9월 25일 경찰관직을 물러나 경성부 위생과에서 근무하였다(출처: 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인물검색 서비스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

www.dbpia.co.kr

된 석진형 도지사는 충분히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였을 것이다.

조선총독부 위생과는 제2차 토지수용의 토지 매수를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먼저 면장, 구장, 지방 유력자의 양해를 구하고 난 뒤,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승낙을 받게 되면, 즉시 실지 조사를 시행하여 지목변경과 소유자를 정확히 조사하여 토지를 실측함과 동시에 지가를 평가하여 매매계약을 즉시 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지매수에 대한 구제책으로 묘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사설묘지를 허가하고, 토지매수 부지가 경작지일 경우에는 다른 소작지 또는 부업 등을 군수 등이 알선하며, 최후로 매수착수부터 매수체결까지 임시경찰관이 출장소를 설치하여 상주하도록 하며, 필요시 경계요원을 증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40]

한편 8월의 제2차 토지수용계획이 공포되자 주민들은 하나이 원장의 관사로 몰려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관계당국의 토지수용 계획 파기를 요구하였다. 이 집단적 저항의 전말은 1926년 9월의 「소록도지혜의원 부지 확장에 대한 소요사건의 건」[41]과 당시 소요사건을 보도 한 『동아일보』의 9월의 신문 보도를 통하여 그 대략적인 소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라남도도지사가 경무국장에게 1926년 9월 20일 보낸 공문에 의하면 주민의 토지수용 반대 소요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소록도 자혜의원 확장에 따른 부지매수에 있어 소록도 주민들은 원장이 주민을 기만하였다고 하며 도민 약 230여명이 병원을 내습하였고, 이때 경찰관이 제지하는 틈을 이용해 원장은 무사히 피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관할 서장은 경상을 입고 순사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도민의 진의를 알기 위해 50명의 경찰을 파견하여 경계 중에 있으며, 본 건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는 도내 120호 중 약 40호는 군수, 면장 등을 통하여 특책을 세울 예정으로 이번 소요범인으로 약 10명을 검거하였다…(중략)

40) 朝鮮總督府衛生課, 1926.9, 「小鹿島慈惠醫院敷地擴張問題ニ對スル騷擾事件ノ件」, 全羅南道知事 『小鹿島慈惠醫院關係綴』(1925년~1934년).

41) 朝鮮總督府衛生課, 1926.9, 「小鹿島慈惠醫院敷地擴張問題ニ對スル騷擾事件ノ件」, 전라남도지사 『소록도자혜의원관계철』(1925년~1934년).

www.dbpia.co.kr

소록도 토지수용 반대 투쟁에 대하여 전라남도 당국자와 총독부의 교신과 보고서, 조사의뢰문 등 약 10여통이 소록도자혜의원 관계철에 남아 당시의 총독부의 폭력적 토지수용실태를 전하고 있다. 또한 소록도 토지수용 반대 투쟁에 대하여 『동아일보』는 '소요사건'이라는 제목으로 9월 22일자, 9월 29일자, 10월 5일자에도 보도하고 있다.[42]

소록도 주민의 토지수용 반대 '도민항쟁'에 대한 문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조선총독부에 보낸 「소록도자혜의원 확장문제와 소요사건에 관한 건(小鹿島慈惠醫院敷地擴張問題ニ對スル騷擾事件ノ件)」의 문서철에는 총독을 시작으로 경무국, 내무국, 재무국의 각 국장과 경무과, 보안과, 위생과, 사회과 등 4과의 각 과장의 공람인이 있는 문서로 조선총독부 위생과가 받았다. 문서의 보고내용은 소요 전의 상황부터 소요 발생, 소요 발생 후의 상황에 이르는 3개 항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소요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인 9월 16일부터 소요사건의 주동자 검거를 끝낸 9월 21일까지 토지수용 반대 투쟁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요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인 9월 16일 오후 3시 관계면장 및 관계주민대표를 초대한 간담회가 고흥경찰서에서 열렸다. 여기에는 소록도를 관할하고 있는 고흥경찰서장, 전남도 경찰부 위생과의 코바타 오이치(小畠太市)경부, 고흥군수, 중추원참의 김정태, 도양면장, 금산면장, 소록리 구장, 소록리 유력자 박맹학(朴孟學), 주순기(朱舜基), 김병길(金炳吉), 고흥읍 유지 이치빈(李致彬), 도양면 유지 이치범(李致範) 등 11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경찰서장, 코바타 오이치(小畠太市)경부, 고흥군수가 의원확장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한 매수방법, 보상구제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수용토지의 매매시가를 기준할 때 그 기준은 토지매매 평가원이 정하는 것에 의하고, 매

42) 『동아일보』에 게재된 주민소요에 대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병환자 250명을 수용하고 있는 소록도 자혜의원은 도청 관할로 변경되면서 수용인원 500명을 증원수용하기 위한 시설확장을 위해 부지 매수를 계획하였다. 주민의 전답과 임야를 매수하기 위해 군수 王宗性과 경찰서원 7~8명이 매수교섭을 하였으나 주민저항에 부딪쳐 19일 경찰과 주민이 충돌하였다. 순천, 보성, 여수, 벌교 등에서 지원 순사가 오고 엄중한 경계를 위해 경찰부로 具 경시(警視), 검사국으로는 테라다(寺田) 검사가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동아일보』 1926년 9월 29일)

www.dbpia.co.kr

수지역내의 묘지이장은 상당액의 이전료를 주고, 사설부지를 허가하며, 매수지역내의 주민가옥은 평가위원이 정한 상당대가와 이전료를 지급한다는 것 등을 포함한 8개 항목에 관한 것이었다.

토지수용에 대한 매수방법과 보상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소록리 구장(區長) 김술이(金述伊)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였다.

> 본 확장문제는 국가의 방침으로써 적절하다고 믿지만, 이를 위해 소록리 주민이 받는 희생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1917년 의원이 설립될 때 장래 확장은 절대 없고 관계주민에게 불안을 주는 일은 없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확장의 일은 실로 의외의 일로 바로 찬동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김술이의 의견에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소록리 유력자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동포 중에서 다수의 나환자가 입원하기 위해 본도에 들어 온 이래 병원의 환자가 만원이 되어 입원이 거절된 까닭에 이들은 실망하여 본 도내를 방황하여 먹을 것을 구하며 절망하는 것을 목격할 때 나는 실로 동정을 가져 사재를 들여 구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섬 주민전체를 생각한다면, 본 섬의 농산물은 연간 1만 2천엔, 해산물 약 4천엔에 이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병원을 확장하는 것은 지역의 생산물의 1/3에 이를 정도로 손실이 상당하여 섬 주민 8백명의 사활문제가 된다. 당국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하여 조기 확장 등을 억제해야 한다.

이처럼 소록리 구장과 소록리 유지 등 주민 대표들은 소록도자혜의원 확장에 따른 토지수용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첫째, 1917년 의원이 설립될 때 장래 확장 등은 절대 없으며 도민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한 점, 둘째, 다수의 나환자가 입원한다면 환자가 만원으로 섬에 와서 병원에 입원하고자 할 때 거절되면 소록도를 방황하여 음식을 요구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 셋째, 섬의 농산물의 약 1/3

www.dbpia.co.kr

이 줄어들어 주민의 생활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기하였다.[43]

이러한 소록도 주민들의 토지수용 반대 주장에 대하여 서장을 비롯하여 군수, 오바타 오이치(小畠太市)경부, 면장 등은 번갈아가면서 "섬 주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또 수용되는 지역이 협소하다는 것을 지도를 보이면서 생산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설득하였다. 그러자 섬 주민대표들은 "이 문제는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섬에 돌아가 주민들에게 간담회 내용을 전하여 섬 주민의 이해를 구하여 평온하게 일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내고 간담회를 산회하였다. 그러나 간담회 산회 후 오후에 도민 등의 소요가 사찰되어 6명의 경찰관이 소록도에 배치되었다.

다음 날인 9월 17일 '간담회 상황'을 전하기 위하여 소록리 개량서당에 도민 150여명이 모였고, 고흥경찰서장 오이카와 마사토(及川正人)[44]와 고흥군수 등은 의원 확장에 따른 토지매수 등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간담회 1부에서 1917년 본원 설치 당시 장래 확장하지 않는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갑자기 확장한다는 것은 하나이 원장의 간책이며, 하나이 원장을 극력 반대하는 격앙된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에 서장, 군수를 비롯하여 코바타(小畠)경부는 "금번의 확장문제는 본부 및 도에서 계획된 일로써 병원장은 절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두둔하였다. 그러나 주민 대표들은 "매우 중요한 토지 및 해안 지역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도민 대부분의 금후 생활에 지장이 생기며, 확장에 대하여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고흥경찰서장 오이카와(及川正人)는 다시 숙고하기로 하고 오후 5시 30분에 간담회를 종료하였다.

---

43) 이러한 소록도 제2차 토지수용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1909년 일본에서 있었던 全生園 부지 매수에 반대한 주민 소요사건의 발생원인과 유사하다. 당시 전생병원의 부지선정에 반대한 주민들의 이유도 '병독이 주민에게 전염되고, 경작물의 가격이 하락하여 촌이 쇠락하는 점'을 들었다. 多磨全生園患者自治會 編, 1993년, 『倶會一処－患者が綴る全生園の七十年－』, 16쪽.

44) 及川正人는 宮城縣출신으로, 1914년 조선총독부 경찰관 연습소 교습생을 거쳐, 1924년 12월 고흥경찰서장에 임명되었다. 1927년 1월 전라남도 경찰부 경무과로 옮겼다. 이후 전남의 여러 경찰서장을 역임하였다(http://www.koreanhistory.or.kr/의 인물검색 서비스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

www.dbpia.co.kr

주민들은 그 이튿날인 18일에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전라도지사가 조선총독부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월18일 도민은 각 부락에서 대책을 협의하고 있지만, 오후 8시경 소록리 박성모(朴聖毛)(30세)가 조선식 나팔을 불며 도민 250여명을 모아 자신을 '수뇌'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도민들에게 말했다. "이번 확장문제는 원장의 간책에 의한 것으로 지금부터 원장의 책임을 물어 화형에 처한다"고 하자 집합한 도민들은 모두 함께 이에 따르며 각자 곤봉, 죽장 또는 돌을 휴대하고 병원 원장관사로 쳐들어갔다. 고흥경찰서장 오이카와(及川正人)는 부하직원 4명과 함께 이를 저지하고, 파견된 경찰 코바타(小畠)경부 등 2명은 원장관사를 경계하였다. 도민들이 습격할 때 하나이 원장은 관사로부터 안전지로 피신하였다.
>
> 군집한 도민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던진 돌, 죽장 등에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오후 11시경이 되어 주민들은 해산하였다. 경찰측 부상자들은 고흥경찰서장・도경부(道警部) 오이카와(及川正人), 고흥경찰서형사・도(道)순사보 다타케(田竹一郎), 도순사 한상근(韓痒根), 순사부장 야바타(矢羽田儀市), 도순사부장 이와나가(岩永眞一) 등 5명으로, 2주간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9월 18일 주민의 토지수용 반대투쟁 속에서 도민들이 재봉기할 것을 우려한 오이카와 서장은 부하직원 17명을 소록도에 비상소집하고 삼엄한 경계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9월 19일에 20명의 지원 직원을 대동하여 도민검거에 나섰다. 또 총독부와 검찰당국도 협의하여 도민검거를 위해 관할 순천지청 테라다(寺田)검사와 장흥지청 무라이(村井)검사를 현지에 파견했다. 계속하여 토지수용 반대 시위에 참가한 섬 주민들을 검거 수색하기 위해 20일에는 다시 21명의 지원 직원을 증파시키고, 아울러 직원의 지휘를 위해 전남경찰부 보안과장 구자환을 소록도에 파견하였다. 테라다와 무라이 두 검사는 9월 21일 현지 도착 직후부터 소요사건의 주동자 검거에 착수하여 10명에 대한 구류장을 발부하고 신병을 그 날로 순천경찰서에 유치하였다.[45]

www.dbpia.co.kr

테라다 검사는 순천지청에 귀청하여 구속자 11명을 취조하여, 그 가운데 2명을 석방하고 9명을 구속하였다. 10월 4일 광주법원에서는 '도민저항'과 관련된 피의자 29명 가운데 9명을 〈소요〉 및 〈소요와 상해〉의 죄명으로 기소하였다. 그 외의 피의자 18명은 기소유예를, 2명은 불기소 처분하였다.

같은 해 11월 13일, 전남도지사가 조선총독에게 보낸 「小鹿島事件 公判ニ關スル件」(전남보제 3727호)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에서 각 피고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다. 朴月半(37)은 징역 6개월, 朴福汗(6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韓萬納, 朴聖毛, 朱良基, 朴冨岩, 姜泰先, 張判基의 6명은 징역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 金述伊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구형되었다. 실형이 구형된 주민과 달리 김술이만 무죄판결이 언도된 것은 소록리 구장(區長)으로서 위치가 판결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총독부와 전라남도는 소록도 주민의 제2차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저항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제압한 후 제1차와 마찬가지로 토지수용 체결을 속행으로 강행 처리하였다. 전라남도지사가 조선총독에게 발송한 10월 2일자의 「보고」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9월 27일 지나 매수지역의 측량을 마치고 29일에 토지평가위원으로 고흥군속(郡屬) 우에다(上田憲志), 도속(道屬) 야마네(山根口作), 금산면장 장남장(張南將), 도양면장 신내우(申乃雨), 소록도 유력자 주순기, 소록도 유력자 장두천을 선정하였다. 면장이하 도민대표 등은 자기의 입장보다 높게 평가 산정하여 금액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으나 거의 한밤중에 간담회가 타결되어 도민들의 양해를 받아 예산 범위 안에서 실행하기로 하고, 그날부터 토지 완매 수속에 착수하였다. 이에 부재자 10명을 제외한 토지소유자 전부의 토지매매 승낙서를 제출하였고, 부재자는 금일중으로 마칠 것…(중략)

45) 소록도 확장과 관련한 주민소요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6년 9월 22일, 9월 29일, 10월 5일과 『매일신보』 1926년 9월 22일, 『조선사상통신』 1926년 10월 4일에도 보도하고 있다.

www.dbpia.co.kr

1926년 제2차 토지수용 내역에 대하여 「小鹿島慈惠醫院敷地買收ニ關スル件」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49, 279평을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관변측 자료는 이를 그대로 차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본 논문은 소록도 공부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실재로 제2차 토지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제2차 토지수용 매수 기간은 20여일이었으나 실제로는 1926년 10월 25일, 10월 27일, 10월 28일의 단 사흘 동안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국유지 편입)되어 토지수용이 완료되었다. 이 때 토지수용을 당한 소유주로는 강긍문, 강금원, 한사범 등 45명의 소록도 주민이 해당되었다. 제1차 토지수용이 소록도 주민이 거주하던 가옥을 포함한 농경지가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달리 제2차 토지수용은 소록도 남부구역의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밭(田)과 논(畓)의 순서로 수용되었다. 공부상에 의하면 대지는 수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1차 수용과는 달리 총독부가 지가보상을 비교적 '후하게' 행한다고 선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가장 주된 요인으로 주민들은 총독부가 약속을 저버린 것을 들었다. 1916년 제1차 토지수용 당시에 총독부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추가수용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보면, 1916년 토지수용 당시에도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반대가 나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인지 토지 수용 자체에 대한 반대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당시 총독부는 '다시는 나시설 부지를 위한 토지수용은 없다'는 약속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여 토지수용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이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26년 토지수용을 재차 강행하자, 1916년에 토지수용을 당했던 강긍문, 강긍순, 강긍원, 강신불, 강곤불, 김경숙, 김신담, 박낙삼, 박복한, 박성조, 박성돌, 서익현, 장성권, 장여진, 장운익, 장운홍, 장양옥, 정황용, 한봉화, 한사범 등 20명의 토지가 또 다시 수용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1916년 토지수용 당시에 총독부가 주민들에게 토지수용은 이것이 유일하며, 더 이상 토지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10년만에 깨트린 것으로 받아들였다.

www.dbpia.co.kr

결국, 제2차 토지수용은 도민항쟁을 제압하고 당초 매수예정 한 동남방향으로 8만 4천여평보다는 적은 총 49, 279평에 해당하는 민유토지를 매수완료하였다. 매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아일보 10월 5일자 기사에는 "총독부는 제2차 토지수용 당시 해안가는 수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논은 두락당 이백원, 밭은 평균 이십원을 보상가로 책정하고, 가옥은 매호에 이전비 일백원으로 이전 보상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46) 나아가 제1차 토지수용과는 달리 제2차 토지수용에서는 토지보상과 주민 구제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매수비'를 책정하여 주민들의 승낙을 얻었다고 선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기주는 총독부 자료를 검토한 연구에서 실상은 이와 달랐다고 주장하였다. 원래 총독부가 예상한 시가대로라면 논은 평당 0.615원으로 1두락(200평)이면 123원이었으나 200원에 낙착되었고, 밭은 평당 0.23원으로 두락당 45원이었으나 20원에 낙착되었다는 것이다. 매입대상이 되는 논은 4천평이고 밭은 1만 5천평, 임야도 32,910평보다 적은 29,441평을 실제로 매수하였으니 실제로 득이 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47)

그렇다면 실제로 소록도 공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민유지 수용부지는 어떠한가. 1926년 제2차 민유지 토지수용 실태에 대한 소록도 공부 전수조사에 의하면 밭과 임야에서 관변자료와 크게 차이를 나타냈다. 공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논과 밭, 임야의 면적 합산만 보아도 62,291평으로써 총독부가 민유지 토지수용에 따른 지가보상으로 예정한 예산으로 많은 민유지 토지수용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총독부의 '높은 지가보상'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공부 전수조사와 관변자료와의 수용 면적이다.

46) 『동아일보』 1926년 10월 5일.
47) 김기주, 2011, 「소록도 자혜의원 나환자정책의 성격」, 『역사학연구』 44집, 257~265쪽.

www.dbpia.co.kr

〈표 3〉 소록도 토지 수용 현황 (1926년)

지목	면적(단위: 평)			비고
	자혜의원 관계철	공부 전수조사/인원(명)	차이	
田(전) 합계	12,260	11,542 (25 명)	-718	
林野(임야) 합계	32,910	46,700 (13 명)	13.790	
畓(답) 합계	4,109	4,049 (7 명)	-90	
대지	0			
분묘	34개			
가옥	4호			
총합계	49,279	62,291	13,012	

출처: 소록도『토지대장』,『임야대장』(고흥군청)

한편 총독부는 제2차 나시설 부지매수가 완료되자 즉시 자혜의원 확장공사를 강행하였다.[48] 시설 확장은 소록도 남쪽의 해안선 근처에 관사 및 숙사가 군집을 이루는 형태로 시설을 증축하였다. 그 북쪽에 병사(病舍)들이 위치하며, 각 병사는 군집을 이루고 있었으나 전염병사(傳染病舍)는 외곽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었다. 소록도 자혜의원은 1927년 6월 시설을 증축하여 환자를 증원 수용하였다.[49] 특히 1927년 소록도 자혜의원 시설 확장이 마무리되면서 부산 나병원에 수용된 중병환자 50명을 소록도로 이송[50]하는 등 선교 나시설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의 이송 수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928년에는 도 당국이 나환자 소멸대책으로 나환자 강송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워, 전국 각 도에 '나환자몰이(狩集)에 착수하여 80여명을 소록도로 강송'하였다.[51] 1927년 소록도자혜의원의 시설확장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총독부가 한센병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하여 소록도로 강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혜의원은 환자의 증원수용에 대해 보조금 증액을 당국에 진정하였

48) 경무국장이 전남지사에게 보낸 〈1927년도 영선공사 실시계획에 관한 건〉과 내무국장이 전남지사에게 보낸 〈신영 및 설비비 지불위탁의 건(1927.7) 그리고 위생과장이 건축과장에게 보낸 〈소록도자혜의원 사무실 기타 증축의 건〉(1927.8)을 참조하면 증축된 자혜의원 시설과 수용인원을 알 수 있다. 출처: 경무국위생과, 1926.2,『小鹿島慈惠醫院關係綴』(1925년~1934년)』.

49)『朝鮮朝日』 1927년 6월 4일.

50)『동아일보』, 1927년 10월 21일.

51)『동아일보』, 1928년 6월 3일.

www.dbpia.co.kr

고, 총독부도 보조금을 증가하였다.

1927년~1928년에 병사를 비롯하여 직원관사와 화장장 개축 등 대규모 확장공사가 시행된 자혜의원은 전국에서 환자를 수용하여 1928년 5월에는 기존 수용인원의 2배에 이르렀다.[52] 수용된 부지에는 계속하여 나시설 확장이 이루어져 1929년 말이 되자 제2차 토지수용에 따른 병사 22동과 진료소, 예배당 등의 부속건물이 1,300여평 규모에 신축·증축되었다. 이를 남병사라 칭하였다.

1929년에는 전국으로부터 환자 196명을 추가로 강제 이송하여 소록도 자혜의원에는 735명의 한센병환자가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1929년 소록도 자혜의원 시설은 부지 총 면적 348,983평에 건물평수는 2,064평에 이르게 되고, 사립 선교 나시설들과 비슷한 수준의 수용인원을 가진 식민지하 조선의 유일한 관립 나시설이 되었다.

4. 1933년 나시설 대확장에 따른 제3차 토지수용

1) 선교 나시설의 변화와 조선나예방협회 설립

1929년 12월 28일 야자와 준이치로(矢澤俊一郎)[53]는 자혜의원 제3대 원장으로 부임하였다.[54] 이때 소록도 자혜의원에 수용된 환자수와 세 개의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요양소에 수용된 환자수를 비교하면 소록도 자혜의원에 수용환자수가 점차 증원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규모의 선교 나시설은 여수 나병원이었다. 여수 나병원은 원래 광주 나병원으로써, 1926년 11월 9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으로부터 강제 이전명령이 있자 15,000원의 국비(총독부)와 지방비 7,000원을 합한

52) 『중외일보』 1928년 5월 14일.

53) 야자와는 九州에서 피부과 〈矢澤병원〉을 개업한 민간의사였다(瀧尾英二, 『朝鮮ハンセン病史: 日本植民地下の小鹿島』, 未來社, 2001, 121쪽).

54) 『조선총독부 관보 제904호(昭和)』, 1929. 12. 28.

www.dbpia.co.kr

22,000원의 보조금과 민간으로부터 3,000원의 기부를 받아 여수군 율촌면 신풍리 내의 섬으로 이주하였다. 신풍리 내의 섬 토지 14만 3천평을 매수하여 같은 해 11월부터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인 1927년 9월 준공과 더불어 광주에서 이전하여 여수 비더울프(William Edward Biederwolf 1868~1936) 나병원이라고 개칭하였다.[55] 광주에서 여수로 이전이 완료된 1927년에 이곳에 수용환자가 가장 많았다가 이후 환자가 약간 감소하게 되었다.[56] 둘째, 최초의 나구료소인 부산 나병원은 여수 비더울프 나병원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나 192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수용환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지속적인 환자 증가에 따른 시설 부족으로 1928년에는 부산 나병원의 환자가 소록도로 이송되어 수용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57] 셋째, 대구 나병원은 1920년대에 수용 인원에 큰 변화는 없었다. 대구 나병원은 1932년까지 수용환자가 증원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소록도자혜의원은 1926년까지는 네 개의 요양소 중에서 가장 적은 규모였다가, 1929년에 이르면 여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요양소가 되었고, 1934년에는 가장 큰 규모의 요양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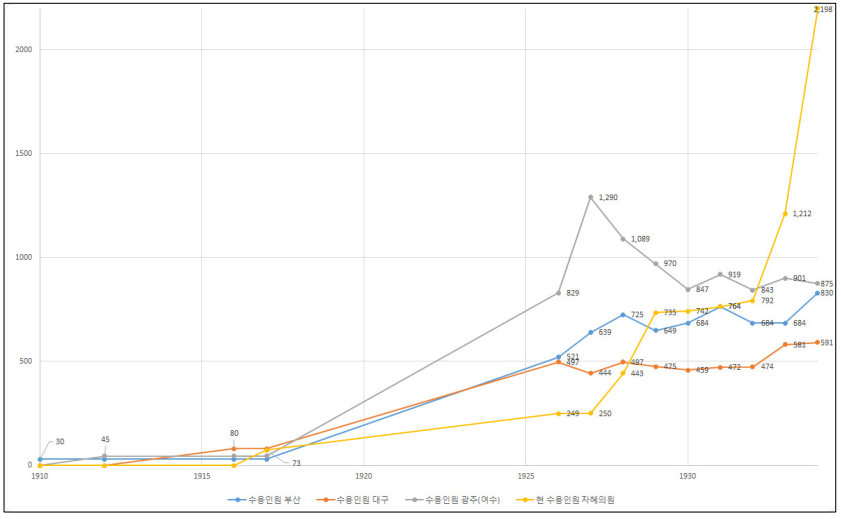
55) 비더울프 나병원은 여수로의 이주과정에서 재정적으로 큰 기여를 한 비더울프의 이름을 병원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이름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월슨 원장의 판단에서 1935년 병원이름을 변경하기로 결정한다. 월슨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의 명칭을 공모하여 "사랑으로 양육한다"라는 뜻의 애양원(愛養園)으로 개칭하였다(애양원100년사 간행위원회, 2009, 『구름기둥, 불기둥－섬김의 동산, 애양원 100년』, 60쪽).

56) 朝鮮總督府, 「癩救療施設」, 『施政二十五年史』, 1935년 10월: 全羅南道知事, 「癩療養施設ニ關スル件 對」(11월24일 通牒), 『全南衛第六日四七號』, 1935년 1월.

57) 『동아일보』 1928년 4월 21일.

www.dbpia.co.kr

〈표 4〉 나요양소 수용인원 추이 (1917~1934) (단위: 명)



출처: 朝鮮總督府警務局長(1935년 1월 26일), 釜山癩病院, 「癩療養施設ニ關スル件」, 拓務省朝鮮警務局長殿, 정부기록보관소소장자료: 朝鮮總督府警務局長(1935년 1월 26일), 大邱 癩病院, 「癩療養施設ニ關スル件」, 拓務省警務部長殿, 정부기록보관소소장자료: 朝鮮總督府警務局長(1935년 1월 26일), 麗水ピーダーワルフ癩病院, 「癩療養施設ニ關スル件」, 拓務省朝鮮部長殿, 정부기록보관소소장자료: 소록도 年報 해당 부분 발췌

한편 1929~30년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일본 경제는 악화되었고, 식민지 조선의 빈민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빈민증가와 더불어 영양결핍에 따른 한센병 환자도 더욱 증가하였다. 여기에 1931년 9월 조선총독으로는 우가키 카즈시게(宇垣一成)가 부임하고, 일제의 만주침략이 감행되자 재정악화는 극심하였다.

총독부 경무국 위생과는 본국 경제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나환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1932년 소록도 대확장사업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30년대 우가키 육군총독의 식민지배 틀을 재편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58] 당시 일본에서는 환자 격리정책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1929년 法律 第14號를 개정하여 국립요양소 설치를 결정하고, 이어 1931년 4월 동

58)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 『소록도 한센병환자의 강제노역에 관한 조사』, 39쪽.

www.dbpia.co.kr

법을 〈나예방법〉으로 개정하고 공립요양소의 국립화조치를 취하였다. 이보다 앞서 3월 18일에는 일본 나예방협회는 재단법인으로써 인가를 받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컨대 1930년 오카야마현 나가시마(長島)에 국립요양소 애생원을 신설하여 종생격리정책을 본격화하여 그때까지 부랑나환자만 수용하던 격리대상을 모든 환자에게 강력하게 적용하였다.

총독부는 일본에서 구현되고 있는 한센병정책과 유사하지만 더욱 억압적인 강제수용과 종생격리정책 체제로 식민지 조선에서의 한센병 통제정책의 재편을 구상하였다.

총독부는 식민지조선에서 1931년 9월부터 최흥종을 비롯한 조선의 기독교계 엘리트층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던 나환자구제회를 방해하여 무력화시켜 활동을 접도록 만들었다.[59] 1932년 2월에 조선나예방협회 설립계획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소록도자혜의원의 의관 사이토 야스오(齊藤安雄)는 『滿鮮之醫界』(1932년 11월)에 「朝鮮內 癩患者 數と 癩根絶に關する 一卓見」이라는 글에서 "조선에는 관립요양소가 유일하게 한 곳인데, 여론을 환기시키고 계몽운동과 교화운동을 일으켜 조선에서 유력한 단체를 설립하여 나근절의 방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유력한 단체'는 총독부가 구상하고 있던 조선나예방협회였다. 총독부는 1932년 12월 조선호텔에서 관민유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나예방협회 발기인회를 개최하고,[60] 곧 이어 재단법인 조선나예방협회를 설립하였다.

조선나예방협회의 회장은 정무총감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德), 부회장·이사장에는 경무국장 이케다 키요시(池田淸), 상무이사에는 경무국 위생과장 니시키 산케이(西龜三圭)가 취임하였다. 이사는 7명인데 경기도 위생과장이던 스오 마사스에(周防正季)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나예방협회의 중앙조직의 주요 임원은 모두 조선총독부의 '고급관료'에 의해서 점하고 있어 형식상 관민합동을 표방하고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관주도 조직이었다.[61]

59) 『朝鮮朝日』 1932년 2월 27일.
60) 『동아일보』 1932년 12월 3일.

www.dbpia.co.kr

조선나예방협회에서 표방한 목적은 '나 예방과 구료에 관한 시설확장'으로 나 근절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목적 실현을 위한 5개항의 사업으로 첫째, 나의 예방 및 구료에 관한 제 사업의 후원연결 둘째, 나 예방 및 구료에 관한 시설 셋째, 나의 예방 및 구료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병행한 선전 넷째, 나환자의 위안에 관한 시설 다섯째, 기타 나 예방 및 구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사업목적은 일본 나예방협회의 주요 사업이 황실 선전활동과 한센병 학술연구인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조선나예방협회는 최초 사업으로 가장 먼저 한센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기 위한 시설 확장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하사금, 국고 및 도비보조, 그리고 민관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선나예방협회 최초 사업은 나환자 2,000명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토지와 기타 설비를 정비하여 이를 정부에 기부한다는 구체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 제3차 토지수용

총독부는 국립 나요양소 설치후보지를 고려하다가 1933년 3월 13일 관립 나요양소가 있는 소록도를 그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소록도를 부지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관련시설이 있다는 점이었다.

『조선나예방협회사업개요(朝鮮癩豫防協會事業槪要)』에 의하면 조선총독부는 전라남도지사에게 나시설 대확장에 필요한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소록도 민유지 전부의 매수와 가옥 등 기타 기득권의 보상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하였다. 토지수용을 위탁받은 전라남도 도당국은 1933년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소록도 실측조사를 마쳤다. 실측조사를 마친 직후 전라남도에

61) 『조선나예방협회요람』(1933년)에 의하면 조선나예방협회의 임원으로는 회장은 총독부 정무총감의 직에 있는 자, 부회장은 총독부 경무국장의 직에 있는 자를 추대하고 이사장을 겸직케하며, 상무이사는 경무국 위생과장의 직에 있는 자, 기타의 이사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장의 직에 있는 자 및 평의원회에서 선출한 자로 하고, 감사는 평의원회가 평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평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였다.

www.dbpia.co.kr

서 임명한 평가위원과 섬 주민 등으로 조직된 위생위원과 교섭하여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당시 소록도의 수용대상 가옥은 150여호, 주민은 약 900명이었다. 총독부는 소록도 나시설확장을 위한 토지수용의 사업 취지를 섬 주민들에게 전하고, 4월 5일 부재자를 제외한 모든 주민과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62] 4월부터 소록도 주민의 이거가 시작되어 6월 말에는 도민 전부의 퇴거・이전을 완료하였다.[63]

1933년 제3차 소록도 토지수용은 관립 자혜의원 시기 2차례의 토지수용과는 달리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이외에 농수산물에 대한 보상액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표 5〉 1933년 소록도 토지수용의 매수가격과 계약가격

내역	매수가격	내역	총 매수가격
답(1평당)	24전 내지 1원 15전	가옥(150여호)	30,544원
전(1평당)	12전 내지 84전	임산물	26,477원
대(1평당)	72전 내지 1원 8전	수산물	32,465원
임야(평당)	1전 2리 내지 3전 4리 15전	이전료	16,620원
		계(확정액)	264,887원

출처: 조선나예방협회, 1933.4, 『朝鮮癩豫防協會要覽』(昭和 八年 四月), 156~158쪽.

위의 〈표 5〉에 보면 전, 답을 비롯하여 민유가옥 150여호(거주민 900여명)와 생산물에 대한 보상가격 일체가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묘지와 비석도 '일정한 기간내에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분묘 1기에 15원 내지 40원의 이전료를 지급하였고, 소록도 주민의 생산 농산물은 입퇴시의 경작성적에 따라 보상을 하며, 어선과 어구에 대하여는 현품인수의 대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보상액수를 결정하였다. 제2차 토지수용 당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농수산물의 예상되는 경작피해에 대한 구제책이 제3차 토지수용에서 일정부분 반영되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독부의 토지보상이 확정되자 불과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에 제3차 토지

62) 『경성일보』, 1933년 4월 8일.
63) 소록도갱생원, 『昭和 14년 年報』, 182~183쪽.

www.dbpia.co.kr

매수는 완료 되었다. 총독부는 토지수용면적 1,138,610평의 토지매수를 끝내고 관유지 348,983평을 더하여 전 도를 나요양소 용지로 구비하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1933년 제3차 토지수용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1933년의 제3차 토지수용에 대하여 소록도 공부를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실제로 '국'으로의 소유권이전은 1933년 4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민유가옥이 있는 대(垈)의 소유자는 78명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150여호'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두 자료가 모두 정확하다면, 소록도 주민들의 약 40%는 자기 소유가옥이 아닌 집에서 사는 일종의 '협호'에 해당한다. 토지의 전체 수용규모는『토지대장』전수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978,401(步)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朝鮮癩豫防協會事業槪要〉의 1,138,610평보다 약간 작은 것이다. 아마도 이 차이는 국유지나 공동체 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6〉 소록도 토지수용 현황 (1933년)

연번	소유자 (단위: 명)	면적(단위: 평), 기타		
		地目	공부면적(步)	소유권이전(1933)
1	78	垈(대) 합계	9,345	國
2	110	田(전) 합계	115,784	國
3	97	林野(임야) 합계	768,657	國
4	88	畓(답) 합계	82,604	國
5	3	道路(도로) 합계	538	國
6	3	地墓境(지묘경)	473	國
7	2	미지정	1,000	國
		총합계	978,401	

출처: 소록도『토지대장』,『임야대장』(고흥군청)

총독부는 1933년 제3차 토지수용에 대하여 '1926년의 토지수용 시에 유혈사태가 일어난 것과는 달리 주민들의 이해로 원만하게 절충하여 타결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64] 당시『부산일보』5월 8일자에는 '小鹿島の島民 喜ん

64) 조선나예방협회, 1935년 10월,『朝鮮癩豫防協會事業槪要(소화 10년)』.

www.dbpia.co.kr

で移住を開始'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도민들이 이주에 만족한다고 보도하고 있다.[65]이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텐데, 가장 큰 이유는 1926년의 유혈충돌과 주민대표의 구속 경험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2차례에 걸친 소록도 토지수용 경험으로부터, 토지 보상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들을 회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3차 토지수용에서는 조선나예방협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소록도시설확장의 당위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뿐만 아니라 소록도주민들에게 이전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보상책과 이주대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총독부의 두 차례의 토지수용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제3차 토지수용이 소록도 전도를 포함하자 물리적 저항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특히 제2차 토지수용과정에서 당한 물리적 폭력은 주민들의 저항의지를 빼앗았고, 소록도에서의 영주희망을 버리게 만들었다.

총독부는 1933년 8월 소록도 전체에 대한 매수가 완료되자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국립나시설로써 자혜의원 대확장 공사를 실행하였다. 나시설 대확장을 주도한 사람은 1933년 9월 1일 4대 원장으로 부임한 스오 마사스에(周防正季)[66]였다.[67]

총독부는 스오 원장에게 나시설 대확장 공사의 진두지휘를 맡기고,[68] 소록도 자혜의원의 국립화 조치와 조선나예방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소록도 자

65) 『부산일보』, 1933년 5월 9일자 기사에 의하면 "주민 150호 가운데 20호는 5월 현재 이주를 마쳤고 9월 말까지 전도의 이주가 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66) 스오 마사스에(周防正季)는 1885년 滋賀縣 栗太郡 老上村 字矢橋에서 출생하였는데, 1902년 17세에 동촌의 의사 周防俊彦의 양자가 되었고, 1909년 의사자격를 취득하여 아이치(愛知)縣立 岡崎병원 외과부에 진찰의로 취직하였다. 1년 뒤 내무성 방역관보가 되어 広島에서 근무하고, 1919년 아이치현 기사학교 위생주사로 전입되었다. 이때 야학교에서 건축, 설계, 제도의 기술을 배웠다. 1921년 3월 30일 조선총독부 기사로 임명되어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27년 구미각국의 의료위생사정 시찰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여 경기도 경무부 위생과장으로서 경기도내 마약중독환자의 대응을 맡았다. 경기도 위생과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때 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장 니시키 산케이(西龜三圭)의 눈에 들어 1932년 12월 조선나예방협회 설립 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도내에서 기부금 모금을 추진하였다. (瀧尾英二, 앞의 글, 148~149쪽: 매일신보 1942년 6월 24일자.)

67) 『조선총독부 관보 1998호』, 1933.9.1

68) 瀧尾英二, 앞의 글, 148~149쪽

www.dbpia.co.kr

혜의원은 1934년 국립 소록도갱생원으로 개칭하고 스오 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시설확장을 추진하였다.

5. 맺음말

20세기 초 조선에서 시행된 근대적 나정책은 한편으로는 선교사들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총독부에 의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전개되었다. 조선을 강제병합 한 일제가 1916년부터 193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록도의 토지를 수용하여 자혜의원을 설립하고 시설을 확장하였다.

본고는 자혜의원 설립과 확장에 따라 이루어진 세 차례의 소록도 토지수용에 초점을 맞춰 총독부와 주민대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제하 소록도 나시설 확대에 따른 토지수용은 식민지배통치정책에 준거하여 각 시기별로 변화되어 실현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포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록도자혜의원 설립을 위한 1916년 제1차 토지수용은 소록도 서쪽지역의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총독부는 주민들에게 추가 토지수용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토지수용을 강행하였다. 당시 주민에게 어떤 형태의 지가보상이 이루어졌는지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으나, 1911년 4월에 제정된 조선토지수용령에 따라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무단통치하에서 이루어진 제1차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저항은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저항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설립당시 토지와 가옥을 수용 당한 소록도 주민들은 섬내로 이주하여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제2차 토지수용은 1926년 자혜의원 나시설 확장 계획에 따른 소록도 남부의 일부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제2차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토지수용을 설득하려 하였다. 총독부는 지가시세보다 높게 지가보상을 책정한다고 선전하

www.dbpia.co.kr

였으나 실제로 제2차 토지보상가는 총독부의 선전과는 달랐다. 소록도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1916년의 약속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이 원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총독부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진압하고 토지수용을 강행하였다. 소록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20 여명의 토지 소유주는 1차에 이어 2차 수용 대상이 되면서 불만의 주요주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차 토지수용은 1933년 조선나예방협회를 전면에 내세운 나시설 대확장 사업에 따른 소록도 전 도의 매수였다. 총독부는 제2차 토지수용 보상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보상과 주민 구제책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회유・설득하였다. 이 때 주민들은 1926년의 경험 때문에 저항의지를 상실하고 총독부의 토지수용을 받아들였다. 비록 이 토지수용에서 보상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으나, 생활 터전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었으므로,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내재한 채 섬 밖으로 이주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록도 원주민은 나시설 설립과 확장에 따라 처음에는 섬내 이주로 주거지를 옮기며 생계를 지속하다가 1933년 소록도 전도의 토지수용이 결정되자 삶의 기반을 버리고 마침내 섬 밖으로 뿔뿔이 흩어져 섬을 떠나게 되었다. 원주민들의 고향상실감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식민지 상황에서, 그리고 해방 후 소록도병원이 국립시설로 유지되면서, 이들은 공론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1983년 윤석선이 만든 지도 속에 소록도를 고향으로 두었던 사람들의 기억이 담겨 있을 뿐이다. 소록도병원의 역사 100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비공식적 영역에서나마 어떻게 존재해왔는지는 좀 더 연구해야 할 주제에 속한다.

투고일 : 2016. 09. 30. 심사완료일 : 2016. 11. 05. 게재확정일 : 2016. 11. 07.

www.dbpia.co.kr

[참고문헌]

고흥군 소록도,『토지대장』·『임야대장』·『제적등본』.

조선총독부, 1929,『小鹿島 慈惠醫院 槪況－昭和 4年』.

_____, 1930,『小鹿島 慈惠醫院 年報－昭和 5年』.

_____, 1931,『小鹿島慈惠醫院 年報 昭和 6年』.

소록도갱생원(1934~1941년),『소록도 년보』.

朝鮮總督府警務局衛生課(1934),『癩療養施設ニ關スル件』,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소.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http://www.koreanhistory.or.kr).

『경성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朝鮮朝日』.

『중외일보』.

『조선사상통신』.

山根正次, 1913,「위생강연」,『朝鮮總督府月報』 第三卷 第 一二號.

小串政治, 1921,「朝鮮ニ於ケル癩患者ノ狀況」,『조선위생행정법요람』.

村田政太, 1921,「朝鮮に於ける救癩問題」,『日本及日本人』.

京畿道警察部, 1924,「癩患者收容ニ關スル件」,『京畿道警察法令聚』.

조선총독부위생과, 1925,「小鹿島慈惠醫院收容人員增加及之カ經費ニ關スル件」, 전라남도지사『小鹿島慈惠醫院關係綴』(1925년~1934년).

_____, 1926,「小鹿島慈惠醫院敷地擴張問題ニ對スル騷擾事件ノ件」, 전라남도지사『小鹿島慈惠義院關係綴』(1925년~1934년).

조선총독부경무국장, 1926,「小鹿島慈惠醫院敷地買收ニ關スル件」, 전라남도지사『小鹿島慈惠醫院關係綴』(1925년~1934년)』.

朝鮮總督府, 1935,「癩救療施設」,『施政二十五年史』, 1935년 10월: 全羅南道知事,「癩療養施設ニ關スル件 對」(11월24일 通牒),『全南衛第六日四七號』.

조선나예방협회, 1935,『朝鮮癩豫防協會事業槪要(소화 10년)』.

대한나관리협회, 1988,『한국나병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한센인 인권 실태조사』.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사료선집 1, 2005,『한센병, 고통의 기억과 질병 정책』.

김기주, 2011,「소록도 자혜의원 나환자정책의 성격」,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김미정, 2012,「나환자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나병정책: 1930~40년대 소록도갱생원을 중심으로」,『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역사문화학회.

多磨全生園患者自治會 編, 1993년,『俱會一処－患者が綴る全生園の七十年－』.

瀧尾英二, 2001,『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ハンセン病資料集成』, 不二出版.

www.dbpia.co.kr

瀧尾英二, 2001,『朝鮮ハンセン病史: 日本植民地下の小鹿島』, 未來社.
芳賀榮次郎, 1935,『芳賀榮次郎自敍傳』(1950년)에 기재한 〈조선시정25주년에의 감회(1934년 기고)〉.
소록도80년사편찬위원회, 1996,『소록도80년사: 1916~1996』.
심전황, 1993,『아으, 70년 찬란한 슬픔의 소록도』, 동방.
유 준, 1991,『한국의 나병치유』, (유준 의과학연구소).
윤석선, 1983,『국립소록도병원』,「소록도4호－잊혀져 가는 소록도의 이모저모－」.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소록도 한센병환자의 강제노역에 관한 조사』.
애양원100년사 간행위원회, 2009,『구름기둥, 불기둥－섬김의 동산, 애양원 100년』, 60쪽.
전창진, 2012,「한・일토지보상보상법 비교연구」,『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제7권 제1호.
정근식, 1997,「한국에서의 근대적 나 구료의 형성」,『보건과 사회과학』 1-1.
_____, 2002,「동아시아 한나병사를 위하여」,『보건과 사회과학』 12, 한국보건사회학회.
_____, 2007,「오키나와 한센병사에서의 절대격리체제의 형성과 변이: 미군정의 영향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73.
_____, 2013,「동아시아 한센병 구료 프로젝트에서의 헤게모니 경쟁과 신체의 정치」.
조석곤, 2001,「토지대장에 나타난 토지 소유권의 변화」,『맛질의 농민들－한국 근세 촌락 생활사, 일조사』.
주상훈・전봉희, 2011,「1910~20년대 관립 자혜의원 계획의 시기적 특징과 변화」,『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 27권, 제11호.
Jane S. H. Kim, Leprosy and Citizenship in Korea under American Occupation (1945~1948), 사학연구 제100호.
최정기, 1994,『일제하 조선의 나환자 통제에 개한 일연구－나환자 관리조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廣瀨貞三, 1999,「朝鮮における土地收用令－1910~20年代を中心に」,『新潟国際情報大學 情報文化學部 紀要』.
한국카톨릭 나사업연합회, 2002,『천주교 구라사』.
한순미, 2010,「나환과 소문, 소록도의 기억－나환 인식과 규율체제의 형성에 관한 언술 분석적 접근」,『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역사문화학회.
_____, 2012,「상처는 왜 쓰는가－한국 나환자 심승의 자전소설과 치유서사의 역사적 맥락」,『인문과학 연구』 제34집.
_____, 2014,「한센인의 삶과 역사, 그 증언 (불)가능성」,『민주주의와 인권』, 제14권 3호.

www.dbpia.co.kr

Land Expropriation and Grassroots Protest in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Sorokdo Charity Hospital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Jung Keunsik* · Kim Youngsook**

Sorokdo Charity Hospital has been established in 1916 and expanded in 1926 and 1933. This paper try to analyze the process of land expropriation and residents's protest. Why in the second land expropriation grassroots protest broke out, but in the third land expropriation, relatively larger than before, did not?

The first instance of expropriation occurred around a village in the northern area of Sorokdo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Sorokdo Charity Hospital. At the time, the Japanese General Government executed the expropriation by appeasing residents with the promise that there would be no more expropriations in the future.

The second expropriation of 1926 aimed to expand the facilities of the leper colony and involved a portion of the land in the southern area of Sorokdo. The residents cited the promise of 1916 in rejecting this proposal, but the General Government forcibly suppressed the residents' strong backlash and enforced the expropriation.

Finally, the third expropriation consisted of a purchase of the entire island in accordance with the undertaking of a massive expansion of the leprosarium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 The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Complete doctoral course in history

www.dbpia.co.kr

in 1933, aided by a connection with the Joseon Leprosy Prevention Association. The residents, who had lost their will to resist from their experience in 1926, had to submit to the General Government's expropriation and moved out of their hometown.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of land and forest register of Sorokdo,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s of appropriated land and formal document written by the colonial authority. It's so difficult to verify the differences by the long silences of original residents. The natives' sense of displacement persisted for a long time, but they did not gain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in the public sphere in the colonial situation. Neither could the natives articulate their views following the national liberation of Korea because Sorokdo Hospital came to be maintained as a national facility.

Key Words: General Government of Korea, Sorokdo charity Clinics, land expropriation, leprosarium, grassroots protest

www.dbpia.co.kr